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

(이효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8
----------	------

발의연월일 : 2014. 4. 14.

발 의 자 : 이효상·추영환·황세영·
권태호·김순점·서경환·
김지근·김영길·신성봉
의원(9명)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울산 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 그 피해와 불편은 전적으로 울산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아직까지도 전산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노인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함.

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존재하던 공공시설을 없애는 법원행정처의 발상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2.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 전산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등기국 통폐합으로 인해 노인과 장년층 등의 인터넷 취약계층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게 될 법원등기소 광역화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

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추세이며 대세로 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

3. 기타사항

○ 보낼 곳 :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가 전산화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이 일반화 되었다는 명목하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이유로 2005년부터 각 구·군별로 설치된 등기소를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중부등기소도 울산지방법원의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인 2014년 10월경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되어 폐쇄될 예정으로 있다.

울산 중부등기소는 북구, 동구, 중구의 울산시민의 50%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8만여건의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울산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아직까지도 전산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노인과 장년층을 포함한 상당수의 인터넷 취약계층 수만명의 불편이 예상되고 교통,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은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결과는 자명하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존재하던 공공시설을 없애고,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겠다는 법원행정처의 발상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존재하던 공공시설을 없애는 법원행정처의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며,

정책이 크든 작든, 시행범위가 넓든 좁든, 시행대상이 많은 작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나 설명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광역등기국 설치로 주변 등기소를 통폐합한 타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노인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예견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킬 울산 중부등기소의 폐쇄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법원행정처는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반시민적인 울산 중부등기소의 폐쇄 계획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으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4만 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울산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졸속행정,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지방법원 중부등기소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 전산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등기국 통폐합으로 인해 노인과 장년층 등의 인터넷 취약계층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게 될 법원등기소 광역화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우리 중구의회는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예상되는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에 대하여 적극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